4·9 총선 한달 앞으로 각당 전략

한, 힘있는 여당 '160석+α' 목표

민주, 거여 독주 '견제론'에 초점
선진, 충청 기반 '제1 야당' 노려

4·9 총선을 한달 앞두고 각당이 본격적인 선거전략 수립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의 연장 선상에서 경제를 화두로 내세운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힘있는 여당'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려면 전통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견제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나라당**=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제1 목표는 원내 과반 의석 확보다. 당초 200석 이상을 자신하다가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강부자(강남 땅부자)'로 불리는 내각 인선 파동과 한나라당 공천 과정에서의 '계파 나눠먹기'식 안배와 일부 공천 내정자의 도덕성 논란 등 '악재'가 부담이 되고 있다. 당내 전략통들은 원내 의석 목표를 '160석±α'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은 총선 공천심사를 마무리 짓는 대로 오는 17일께 총선 중앙선대위 및 상황실을 발족하면서 본격적인 총선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중앙당을 ▲전략기획단 ▲홍보기획단 ▲정책단 ▲조직 직능단 ▲유세지원단 등 5개 지원단으로 재편하고 '민생경제특위'를 민생공약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통합민주당**=이명박 정부의 초반 부진을 기회로 대선참패 후 흐트러진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더욱이 공천 쇄신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총선 '참패' 예상에서 "이제 해볼 만하다"는 반응이 당내외에서 퍼지면서 잔뜩 고무된 분위기다.

우선 민주당은 지방·중앙정부 권력에 이어 입법부까지 장악하려는 한나라당의 '일당 독주'를 견제하는 상징적 의미에서 '과반의석 확보 저지'라는 목표를 두기로 했다.

당안팎에서는 당초 60~80석 수준을 예상하다가 70~100석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초기부터 난맥상을 드러낸 ▲고위직 인사 ▲정부 조직개편 ▲영어몰입 교육 ▲대운하 추진 프로젝트를 적극 쟁점화함으로써 거대 독재여당에 맞서는 '견제 야당'으로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기타 정당**=자유선진당은 연고지인 충남 예산·홍성에 출마하는 이회창 총재를 비롯, 전현직 의원 상당수를 충청권에 투입해 충청권발 바람몰이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지지율 3%에 그치며 참패했던 민주노동당의 이번 총선 목표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이다. 정당투표에서 15% 이상 득표하고 경남 창원을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권영길 의원 등 6명의 현역의원들이 선전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심상정, 노회찬 의원 주도로 오는 16일 창당하는 진보신당(가칭)은 '진보다운 진보'를 기치로 내걸며 평등·생태·평화·연대를 핵심가치로 총선에 임할 방침이다.

창조한국당은 지역구 20석, 비례대표 10석 등 30석을 목표로 총선 전략을 짜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정' vs '견제' 사활건 한판 승부

■ 쟁점과 변수

이번 4·9총선에선 한나라당의 '국정안정론'과 통합민주당 등 야당의 '견제론'이 정면 대결하는 가운데 각 당의 공천쇄신 및 후폭풍 수습, 수도권과 충청 표심의 향배, 이명박 정부 초기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등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관건이다.

◇**국정안정 vs 견제론**=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여당의 과반의석 확보가 필요하다는 '국정안정론'과, 중앙 및 지방 행정, 지방의회까지 모두 장악한 '거여(巨與)'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야당으로서 의미 있는 의석 확보가 절실하다는 '거여 견제론'이 이번 총선의 최대 화두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여당에 단 두 차례만 과반의석을 몰아줬던 예에서 볼 수 있듯 우리 국민에게 묘한 견제심리가 있기 때문에 여론이 총선 때까지 이대로 흘러갈 것이라고는 예단할 수 없는 상태다.

◇**초기 국정운영 평가**=지난 대선은 참여정부나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 성격이 짙었다. 반면 이번 총선은 지난달 25일 취임한 이명박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가 표심의 방향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치권에서는 "소위 참여정부 심판론, 노무현 심판론의 유통 기한은 지난 대선을 끝으로 완전히 끝났고 이제 이명박 정부 평가로 넘어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천쇄신·후유증 수습**=각 당이 외치고 있는 '개혁공천'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도 총선의 변수로 대두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민주당은 '박재승의 쿠데타'로 불릴 정도로 공천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친이(親李), 친박(親朴)' 계파 갈등이 불거지면서 그다지 공천쇄신의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천 후유증을 어느 정당이 빠르게 수습할지도 관건이다. 공천을 받지 못한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소속 출마나 제3 정당으로의 이동도 예상되는데다, 한나라당의 공천 결과에 따라서는 박근혜 전 대표 측 의원들의 집단 탈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도권·충청 표심**=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영남과 호남지역을 반분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는 111석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 달려있다. 지난 대선에서 출신지나 원적지에 따른 투표 성향이 약화됐던 수도권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어떤 투표행태를 보일지가 관심이라는 관측이다.

한나라당 후보가 대선에서 쉽사리 이겨본 적이 없던 수도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승리한 데는 호남출신 수도권 유권자들의 표를 상당부분 흡수한 요인도 컸다는 분석인 만큼 이번 총선에서 이들의 표가 어디로 향할지에 따라 승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당원집회 오늘부터 총선까지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4·9 총선'을 한 달 앞둔 10일부터 각 정당의 당원집회 및 교육 등을 할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속 당원의 단합이나 수련, 연수, 교육 등 명목을 불문하고 선거가 열리는 선거구의 당원을 대상으로 총선 필승결의대회를 포함한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과 지시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당원간의 면접이나 소속 당원을 대상으로 한 창당 및 합당대회, 후보자선출대회 등은 예외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한편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등 각 정당의 공천 확정이 늦어지면서 공천 미정지역의 예비후보들도 사실상 총선출정식인 당원집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 채소 매장을 둘러보던 중 시장을 찾은 한 시민과 현 물가상황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생산자와 소비자 직통돼야"

李 대통령,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제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통돼야 생산자도 좋고 소비자도 좋다"며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초구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와 광진구 자양동 재래시장인 골목시장을 잇따라 방문한 자리에서 "소비자들과 서민들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민생현장을 방문한 것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를 직접 챙기고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남성우 농협유통 사장의 안내로 양재동 하나로마트 매장 구석구석을 둘러보면서 라면과 쌀 가공식품, 수산물, 돼지고기, 채소 등의 가격동향을 일일이 물어보고 매장 직원과 소비자들로부터 물가상황에 대한 진솔한 얘기를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과일 값이 떨어지고 야채 값도 안정이 됐더라. 생선 값은 조금 오르고 생필품 가격은 하도 올라서..."라며 물가상황에 대한 촌평을 한 뒤 유가에 대해선 "기름값은 어쩔 수 없다. 불가항력으로 기름을 적게 써야지..."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양파값이 20%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수매가가 문제다. (물량이) 풀릴 때 농협이 수급조절을 잘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자양동 골목시장으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수산물 및 건어물 가게를 돌아보면서 "장사가 잘 돼야 할 텐데... 잘 되게 우리가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꽈배기와 도넛 등 6천원 어치의 물건을 직접 구입했으며, 상가 상인 대표들과 시장 내 순댓국집에서 순댓국밥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이 대통령은 식사 도중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재래시장 고유의 문화전통을 가미해 관광명소로 만드는 등 특색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직자들 정신적으로 긴장해야"

공정거래위원장 등 장·차관급 22명 임명장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지금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정신적으로 긴장해야 하고 국민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장·차관급 2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세상에 살기 때문에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9일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새 정부가 아침 일찍부터 일한다고 하나 우리가 한시간 일찍 일어나면 국민은 한시간 늦게 일어나도 될 것"이라며 "새 정부는 저 자신부터 국민을 섬기는 철저한 봉사정신으로 일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달청 업무와 관련, "잘못하면 사는 쪽과 파는 쪽보다 중간에서 비용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납품업자에게 적절한 이익을 보장해 주면서 구매 방법과 규정, 관례를 잘 보완하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제가 조달청장을 하면 예산을 10%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 절감에 전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제는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때가 됐다"고,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군림하는 금융감독이 아니라 서비스와 도와주는 금융감독 체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각 보고했다. /연합뉴스